

1. 총평

2020년 지방직 7급 행정학 문제는 기출문제 내용을 벗어난 새로운 문제 자체는 없으나, 지문 하나하나를 보면 새롭게 출제된 내용이 상당히 많아 수험생이 느끼는 체감 난도는 높았을 것이다.

6번(정책수단) 문제의 경우, 일부 논란이 제기될 수 있는 문제로서 많은 수험생들이 어려움을 겪었을 것이다.

이와 같은 난이도로 구성된 문제에서 행정학 점수가 85점 이상이라면 우수, 75점에서 80점까지는 보통, 70점 이하는 미흡에 해당한다.

2. 출제빈도(영역별과 유형별) 및 시사점

교재 영역별	문제유형별
기초이론	6 개념문제 1
정책학	3 이론문제 13
조직이론	1 법령문제 6
인사행정론	4 사례문제 -
재무행정론	2
지방자치론	3
행정환류론	1

영역별 출제빈도를 보면 평균적인 출제빈도에 비해 기초이론은 2문제 정도 더 많이 출제되었고, 조직이론에서는 2문제 이상 더 적게 출제되었다. 그리고 지방자치론에서 3문제가 출제됨에 따라 선택과목에서 지방자치론을 선택했던 수험생들에게 유리하게 작용했을 것으로 본다.

다만, 영역별 출제 빈도에 민감하게 반응해서는 안 된다. 출제자가 누구인가에 따라 영역별 출제빈도는 달라지기 때문이다.

한편 문제유형별 출제 빈도를 보면, 이론에 해당하는다고 볼 수 있는 개념, 이론, 학자, 사례에 해당하는 문제가 14문제이고, 법령 문제가 6문제로 법령 문제의 출제가 평균적인 출제빈도에 비해 1문제 정도 더 많이 출제되었다. 이론과 법령 골고루 출제된다는 전제 하에 공부하는 것이 좋다.

3. 문제의 난이도 분석

상	6.
중상	2, 10, 15, 18.
중	1, 5, 7, 8, 12, 17, 19, 20.
중하	3, 4, 9, 13, 14, 16.

- 1) 6번 문제 - 일부 논란이 제기될 수 있는 문제로서 많은 수험생들이 어려움을 겪었을 것으로 본다. 해설을 참조하기 바란다.
- 2) 2번 문제 - 법령 문제로서 이해를 바탕으로 암기해야 하는 문제이다(지방자치론을 선택한 수험생의 경우 쉽게 풀었을 것으로 본다.)
- 3) 10번 문제 - 미국 행정학의 흐름을 중심으로 공부할 경우 쉽게 풀 수 있는 문제로 볼 수도 있으나, ②번 지문(해밀턴주의)으로 인해 혼란이 생긴 경우 어려웠을 수도 있다.
- 4) 15번 문제 - 정답에 해당하는 ②번 지문으로 인해 쉽게 풀 수도 있었으나, ③과 ④번 지문이 생소해서 어려움을 겪었을 수 있다.
- 5) 18번 문제 - 정답에 해당하는 ③번 지문에 해당하는 내용이 교재에 있고, 기본계획이기 때문에 총괄부처에서 수립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풀 경우 쉽게 풀 수도 있었으나, ①②④번 지문이 생소해서 어려움을 겪었을 것으로 본다.

4. 당부 사항

- 1) 중요한 것은 기출문제를 철저히 공부해야 한다. 그러나 7급의 경우 9급에 비해 기출문제를 벗어난 문제가 자주 출제된다. 따라서 기본서 내용을 중심으로 공부하면서 기출문제 외에 모의고사 문제 등도 함께 공부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 2) 이해할 것은 이해하고 암기할 것은 암기하자. 항상 강조하는 내용이지만, 행정학의 경우 이해를 중심으로 하되, 단순 암기사항(법령 내용이나 특정 학자 입장)은 암기해주면 된다. 제반 이론이나 제도에 대한 기본 개념을 철저히 파악하고, 그 특징이나 장점, 단점 등을 정확히 추론할 수 있는 능력 외에 암기를 병행해야 한다.
- 3) 자신감을 가지고 다음 시험을 준비하라. 시험이 끝나고 나면 수험생을 가장 힘들어하는 것은 자신감 상실이다. 그러나 행운은 전혀 예상치 못한 때에 찾아온다. 자신의 능력에 대한 절대적 신뢰를 바탕으로 차분한 마음으로 다음 시험에 대비하기 바란다.

합격의 기쁨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위계점 올림

1. 로위(Lowi)의 정책유형 분류에서 강제력이 행위의 환경에 직접적으로 적용되는 것은? 2020 지방직 7급

- ① 재분배정책(redistributive policy)
- ② 규제정책(regulatory policy)
- ③ 구성정책(constituent policy)
- ④ 분배정책(distributive policy)

[해설] ①(O). 강제성 적용 영역이 행위의 환경이고 강제 가능성은 직접적인 것은 재분배정책이다.

구 분		강제성 적용 영역	
		개별적 행위	행위의 환경(모든 행위)
강제의 가능성	간접적	배분정책 : 10C 토지정책, 보조금	구성정책 : 선거구 조정, 기관 신설
	직접적	규제정책 : 기준 이하 상품 규제, 불공정 경쟁 규제, 사기광고 규제	재분배정책 : 연방은행의 신용통제, 누진소득세, 사회보장제

[정답] ①

☞ 참고 : 2020 7·9급 알파행정학, pp.221-222.

2. 다음 중 현행 법률상 허용되지 않는 것만을 모두 고르면?

2020 지방직 7급

- ㄱ. 비례대표 지방의회의원에 대한 주민소환
- ㄴ. 수사에 관여하게 되는 사항에 대한 주민감사청구
- ㄷ. 수수료 감면을 위한 주민의 조례 개정 청구
- ㄹ. 지방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주민투표

- ① ㄱ, ㄷ
- ② ㄱ, ㄴ, ㄷ
- ③ ㄴ, ㄷ, ㄹ
- ④ ㄱ, ㄴ, ㄷ, ㄹ

[해설] ㄱ. 비례대표 지방의회의원에 대한 주민소환제도는 인정되지 않고 있다. 주민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지방의회의원(비례대표 지방의회의원 제외)을 소환할 권리를 가진다.

ㄴ. 수사나 재판에 관여하게 되는 사항은 주민감사청구 대상에서 제외된다.

- <주민감사청구 대상에서 제외되는 사항>
- (1) 수사나 재판에 관여하게 되는 사항
 - (2)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사항
 - (3) 다른 기관에서 감사하였거나 감사 중인 사항, 다만, 새로운 사항이 발견되거나 중요 사항이 감사에서 누락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4) 동일한 사항에 대하여 주민소송이 진행 중이거나 그 판결이 확정된 사항

ㄷ. 지방세·사용료·수수료·부담금의 부과·징수 또는 감면에 관한 사항은 조례제정개폐청구 대상에서 제외된다.

- <조례제정개폐청구 대상에서 제외되는 사항>
- (1) 법령에 위반하는 사항
 - (2) 지방세·사용료·수수료·부담금의 부과·징수 또는 감면에 관한 사항
 - (3) 행정기구를 설치하거나 변경하는 것에 관한 사항이나 공공시설의 설치를 반대하는 사항

ㄹ. 공무원의 인사·정원 등 신분과 보수에 관한 사항은 주민투표 대상에서 제외된다.

- <주민투표 대상에서 제외되는 사항>
- (1) 법령에 위반되거나 재판 중인 사항
 - (2)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권한 또는 사무에 속하는 사항
 - (3) 지방자치단체의 예산·회계·계약 및 재산관리에 관한 사항과 지방세·사용료·수수료·부담금 등 각종 공과금의 부과 또는 감면에 관한 사항
 - (4) 행정기구의 설치·변경에 관한 사항과 공무원의 인사·정원 등 신분과 보수에 관한 사항
 - (5) 다른 법률에 의하여 주민대표가 직접 의사결정 주체로서 참여할 수 있는 공공시설의 설치에 관한 사항(단, 지방의회가 주민투표실시를 청구할 때에는 실시)
 - (6) 동일한 사항에 대하여 주민투표가 실시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항

[정답] ④

☞ 참고 : 2020 7·9급 알파행정학, pp.804-812.

5. 신제도주의의 주요 분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2020 지방직 7급

- ① 합리적 선택 제도주의는 개인이 합리적이며 선호는 제도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변화하는 것으로 가정한다.
- ② 사회학적 제도주의는 제도의 변화과정을 설명할 때 경로의존성을 강조하며, 제도의 운영 및 발전과 관련하여 권력의 비대칭성에 초점을 맞춘다.
- ③ 역사적 제도주의는 중범위적 제도 변수가 개별 행위자의 행동과 정치적 결과를 어떻게 연계시키는지에 대해 초점을 맞춘다.
- ④ 사회학적 제도주의는 사회적 딜레마를 해결하기 위해 사람들이 스스로 만드는 게임의 규칙을 제도로 본다.

[해설] ①(X). 합리적 선택 제도주의는 인간을 주어진 여건 하에서 자신의 이익을 극대화하려고 하는 합리적·경제적 행위자로 가정한다. 그리고 개인의 선호는 개인의 선호는 안정적이며 선형적으로 주어진 것으로 가정한다(외생적).

②(X). ②번 지문은 역사적 제도주의에 대한 설명이다. 역사적 제도주의는 제도를 설명할 때 역사적 맥락과 권력의 불균형을 중시한다. 이에 반해 사회학적 제도주의는 조직이 어떤 제도적 양태를 갖게 되느냐 하는 것은 조직이 기반을 두고 있는 환경적 상황, 즉 제도의 장에 의존하는 바가 크다고 보면서, 결과성(consequentiality)의 논리보다는 적절성(appropriateness)의 논리를 강조한다.

③(O). 역사적 제도주의는 분석 수준에 있어서 마르크스이론의 계급이나 근대화이론의 사회·경제적 발전과 같은 거시 수준의 변수가 아니라, 국가와 사회의 관계를 구조화하는 제도적 배열이라는 중위 수준의 변수를 사용한다. 그리고 제도가 개인의 선호와 행동에 미치는 영향과 국가의 정책이나 정책결과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다.

④(X). ④는 합리적 선택 제도주의에 대한 설명이다. 즉, 합리적 선택제도주의는 기능주의적 관점에서 사회가 직면하는 제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장치로서 제도를 인식하며, '공식적 제도의 의도적 설계'를 중시한다. 이에 반해 사회학적 제도주의는 제도의 규범적 측면보다 인지적 측면을 중시하며, 결과성의 논리보다 적절성의 논리를 강조한다.

[정답] ③

☞ 참고 : 2020 7·9급 알파행정학, pp.152-156.

6. 정책수단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2020 지방직 7급

- ① 비딩(Vedung)은 정책 도구를 규제적 도구(sticks), 유인적 도구(carrots), 정보적 도구(sermons) 등으로 유형화한다.
- ② 권위(authority)에 기반을 둔 정책수단은 예측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사회적 위기 상황에 적합한 수단이다.
- ③ 정책수단의 선택은 정치적인 성격을 가지며, 특히 이념적으로 지향하는 가치는 정책수단의 선택에 핵심적인 영향을 미친다.
- ④ 살라몬(Salamon)에 따르면, 공적 보험은 공공기관을 전달체제로 활용한다는 점에서 직접적인 정책수단이다

[해설] ①(O). 비딩(Vedung)은 전통적 3분법에 근거하여 정책도구를 규제적 도구(sticks, 채찍), 유인적 도구(carrots, 당근), 정보적 도구(sermons, 설교) 등으로 구분하였다.

<전통적 분류[Vedung(1988)] : 규제, 유인, 설득>

- ① 규제(regulation) : 강압적 권력에 바탕을 둔 정책수단으로서, 정부가 민간의 활동에 대해 제약을 가하는 것이다(채찍, sticks).
- ② 유인(incentives) : 보상적 권력에 바탕을 둔 정책수단으로서, 민간에 보조금 등을 지급하여 활동을 유도하는 것이다(당근, carrots).
- ③ 설득(persuasion) : 규범적 권력에 바탕을 둔 정책수단으로서, 홍보 등을 통해 민간의 행동 변화를 이끌어내는 수단이다(설교, sermons).

②(O). 권위(authority)에 기반을 둔 정책수단으로 대표적인 것은 규제이다. 규제는 예측 가능성이 있으므로 정부활동의 조정과 계획수립에 유리하며, 즉각적인 반응이 필요한 위기 시에 적합한 수단이다. 그리고 보조금이나 세금면제와 같은 다른 수단보다 직접적인 비용이 적게 소요된다.

③(O). 정책수단은 정책목표와 목표-수단의 인과관계분석에 의해 결정된다. 그런데 정책 수단의 선택도 정치적으로 중립적인 것은 아니며, 다양한 정치적 요인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 이러한 요인으로는 이해관계, 이념(가치 체계), 개인 성향, 제도, 국제환경 등이 있다.

④(X). ④번은 Salamon(2002)의 'The Tools of Government'의 논문에서 근거를 두고 출제된 지문이다. 그런데 해당 논문에서 보험(insurance)을 직접성이 강한가 약한가의 구분에서는 직접성이 강한 쪽으로 분류하면서도, 직접 수단과 간접 수단의 분류에서는 간접 수단으로 분류하고 있기 때문에 논란이 될 수 있다고 본다.

(1) Salamon(2002), 'The Tools of Government', Table 1-8(29쪽), Table 1-11(39쪽)

1) Salamon은 직접성의 정도에 따라 분류한 정책도구에서 보험(insurance)을 직접성이 높은 수단으로 분류하

고 있다.

TABLE 1-8 Policy Tools Grouped by Degree of Directness

Degree of Directness	Illustrative Tools	LIKELY IMPACTS				
		Effectiveness	Efficiency	Equity	Manageability	Legitimacy/ Political Support
Low	Tort liability Grants Loan guarantees Government-sponsored enterprises Vouchers	Low	High	Low	Low	High
Medium	Tax expenditures Contracting Social regulation Labeling requirements Corrective taxes/ charges	Low/Med.	Medium	Low	Low	High
High	Insurance Direct loans Economic regulation Public information Government corporations Direct government	High	Medium	High	High	Low

- 2) 한편, Salamon은 정부조치(action)의 도구를 직접 수단과 간접 수단으로 재분류하면서 보험(insurance)을 간접 수단으로 분류하고 있다.

TABLE 1-11 Tools of Government Action Covered in This Book

Direct Tools	Indirect Tools
Direct government	Social regulation
Government corporations	Contracting
Economic regulation	Loan guarantees
Public information	Grants
Direct loans	Tax expenditures Fees and charges Insurance Tort law Vouchers Government-sponsored enterprises

(2) 국내 교과서의 설명 : 위 두 가지 표 중 어떤 표를 이용하느냐에 따라 설명이 다르다.

1) 이종수 외(2014), 「새행정학」, 대영문화사, 467쪽.

표 11-3 직접성의 정도에 따른 행정 수단과 효과

직접성	행정 수단	효과성	효율성	형평성	관리 가능성	정당성 (정치적 지지)
낮음	손해책임법, 보조금 대출보증, 정부출자기업 바우처	낮음	높음	낮음	낮음	높음
중간	조세지출, 계약 사회적 규제, 벌금	낮음/중간	중간	낮음	낮음	높음
높음	보험, 직접 대출 경제적 규제, 정보 제공 공기업, 정부 소비	높음	중간	높음	높음	낮음

자료: Salamon(2002: 29).

이종수 외 교재(467쪽)에서는 위 표에 근거를 두고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손해책임법, 보조금, 대출보증, 정부출자기업, 바우처 등은 직접성이 낮은 대표적인 행정수단들이다. 반면, 전통적으로 정부가 직접 수행하는 보험, 직접 대출, 경제적 규제, 정보 제공, 공기업, 정부 소비 등은 직접성이 매우 높다.”

2) 남궁근(2008), 「정책학」, 법문사, 94쪽.

〈표 3-2〉 Salamon의 정책수단별 산출/활동, 전달수단, 전달체계 요약

	정책수단	산출/활동	전달수단	전달체계
직접수단	정부소비	재화 또는 서비스	직접제공	공공기관
	경제적 규제	공정가격	진입 또는 가격규제	규제위원회
	직접대출	현금	대출	공공기관
	공기업	재화 또는 서비스	직접제공/대출	준공공기관
간접수단	사회적 규제	금지	규칙	공공기관/피규제자
	계약	재화 또는 서비스	계약 및 현금지급	기업, 비영리기관
	보조금	재화 또는 서비스	보조금 제공, 현금지급	지방정부, 비영리기관
	대출보증	현금	대출	민간은행
	보험	보호	보험정책	공공기관
	조세지출	현금, 유인기제	조세	조세기관
	사용료, 과징금	재정적 제재	조세	조세기관
	손해책임법	사회적 보호	손해배상법	사법제도
	바우처	재화 또는 서비스	소비자 보조	공공기관/소비자

출처: Salamon, 2002, *The Tools of Government*, 39쪽 〈표 1-11〉 및 21쪽 〈표 1-5〉를 토대로 재구성함.

[정답] ④

☞ 참고 : 2020 7·9급 알파행정학, pp.216-217.

7. 다음 중 예산 원칙의 예외를 옳게 짝 지은 것은?

2020 지방직 7급

	한정성 원칙	단일성 원칙
①	목적세	특별회계
②	예비비	목적세
③	이용과 전용	수입대체경비
④	계속비	기금

- [해설] ①(X). 목적세는 통일성 원칙에 위배되고, 특별회계는 단일성과 통일성 원칙에 위배된다. 목적세는 한정성의 원칙에 위배되지는 않는다.
- ②(X). 예비비는 한정성의 원칙에 위배되고, 목적세는 통일성의 원칙에 위배된다. 목적세는 단일성의 원칙에 위배되지는 않는다.
- ③(X). 이용과 전용은 한정성의 원칙에 위배되고, 수입대체경비는 통일성의 원칙에 위배된다. 수입대체경비는 단일성의 원칙에 위배되지는 않는다.
- ④(O). 한정성의 원칙에 위배되는 것으로 이용, 전용, 예비비 지출, 수입대체경비, 이월, 계속비, 국고채무부담행위를 들 수 있고, 단일성 원칙에 위배되는 것으로 특별회계, 기금, 추가경정예산을 들 수 있다.

예산원칙			예 외
재정 민주 주의	공개성		국방비 예산, 국가정보원 예산, 국가안전보장 관련 예비비 사용
	명확성(명료성)		총괄(총액)예산(lump-sum budget), 총액계상예산
	사전의결		준예산, 긴급재정·경제처분, 선결처분, 예비비 지출, 사고이월, 전용, 이체
재원 배분	한정성	목적 외 사용 금지	이용, 전용
		초과지출 금지	예비비, 추가경정예산
	한계성	기한 경과 금지 (회계연도 독립)	이월(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 국고채무부담행위, 지난 연도 수입, 지난 연도 지출, 앞당겨 충당·사용(조상충용, 2014년 11월 29일부로 폐지된 제도임)
	통일성(국고통일)		특별회계, 기금, 목적세, 수입대체경비, 수입금마련지출
회계 관리	단일성		특별회계, 기금, 추가경정예산
	완전성(포괄성, 총계예산)		순계예산, 현물출자, 전대차관, 초과수입을 초과지출에 충당할 수 있는 수입대체경비, 부득이한 사유로 세입예산 초과 시 초과지출 가능한 차관물자대
	정확성		적자재정, 흑자재정
현대 재정 사업 관리	계획성 : 사업계획과 재정계획의 연계		
	성과 중심 : 성과계획서 및 성과보고서 작성		

[정답] ④

☞ 참고 : 2020 7·9급 알파행정학, pp.652-653.

8. 합리성의 개념과 유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2020 지방직 7급

- ① 사이먼(Simon)의 실질적(substantive) 합리성은 행위자가 합리적인 선택을 할 수 있는 모든 지식과 능력을 소유하고 있다고 가정한다.
- ② 디징(Diesing)은 합리성을 기술적 합리성, 경제적 합리성, 사회적 합리성, 법적 합리성, 진화론적 합리성으로 나누어 설명한다.
- ③ 기술적 합리성은 일정한 수단이 목표를 얼마만큼 잘 달성 시키는가, 즉 목표와 수단 사이에 존재하는 인과관계의 적절성을 의미한다.
- ④ 사이먼(Simon)은 인간이 실질적 합리성을 사실상 포기하고, 만족할 만한 대안을 선택하려는 절차적 합리성을 추구한다고 주장한다.

[해설] ①(O). 사이먼(Simon)의 내용적(실질적, substantive) 합리성은 목표 달성에 기여하는 행위, 즉 효용의 극대화를 가져오는 가장 능률적인 행위를 말한다. 실질적 합리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인과관계에 대한 정확한 지식이 필요하기 때문에 행위자가 합리적 선택을 할 수 있는 모든 지식과 능력을 소유하고 있다고 가정한다.

- ②(X). 디징(Diesing)은 합리성을 정치적 합리성, 경제적 합리성, 사회적 합리성, 법적 합리성, 기술적 합리성으로 나누었다.

한편, 진화론적 합리성(evolutionary rationality)은 생물학적 진화론에 기초한 개념으로서, 변이 또는 선택의 과정이 반복되면서 환경의 요구에 보다 잘 부합하는 대안이 발견되는 현상을 지칭한다. 정책결정과 관련해서는 회사모형에서 말하는 표준운영절차의 변화나 사이버네틱스 모형에서 말하는 적응적 합리성, 정책집행과 관련해서는 상황적 접근방법에서 말하는 합리성이 진화론적 합리성과 관련된다.

- ③(O). 기술적 합리성은 목적 달성에 적합한 수단을 탐색하는 데 중점을 둔다. 기술적 합리성은 목적-수단의 연쇄관계 내지 계층적 구조를 핵심으로 하고 있다.

- ④(O). 사이먼(Simon)이 제시한 절차적(procedural) 합리성은 인지 과정상의 합리성(미시적 합리성)을 의미하며, 어떤 행위가 의식적인 사유 과정의 산물일 때 합리성이 존재한다고 말한다. 사회가 복잡해지면서 내용적(실질적) 합리성이 제약을 받기 때문에 만족할 만한 대안을 선택하는 절차적 합리성이 중요하다고 보았다.

[정답] ②

☞ 참고 : 2020 7·9급 알파행정학, pp.206-207.

9. 행정가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2020 지방직 7급

- ① 디мок(Dimock)은 과학적 관리론에 입각한 기계적 효율관을 비판하며 사회적 효율성을 강조했다.
- ② 프레더릭슨(Frederickson)과 왈도(Waldo) 등 신행정학의 학자들은 사회적 형평성이 행정가치로 주목받는데 크게 기여하였다.
- ③ 롤즈(Rawls)가 제시한 정의론의 차등 조정의 원리는 다시 차등 원리와 기회 균등의 원리로 나뉜다.
- ④ 슈버트(Schubert)는 공익실체설의 입장에서 공익이 민주적 정부 이론의 중심에 놓여 있다고 주장했다.

[해설] ①(O). 디мок(Dimock)은 정치행정일원론(통치기능성)을 주장한 학자로서, 과학적 관리론에 입각한 기계적 효율성을 비판하면서 사회적 효율성을 강조했다.

기계적 능률성	사회적 능률성(민주성)
기계적·물리적·금전적 측면의 능률	사회적 차원의 능률
가치중립적·기술적·객관적·대차대조표식 능률	종합적·인간적·합목적적·규범적·장기적·봉사적 능률
행정관리론, 과학적 관리론	통치기능설, 인간관계론
Gulick	Dimock, Mayo

- ②(O). 프레더릭슨(Frederickson)과 왈도(Waldo) 등 신행정론자들은 가치와 사실의 분리를 통한 가치자유를 신봉하는 논리실증주의를 비판(배격)하고, 가치에 대하여 평가적이며, 가치판단에 대하여 적극적인 의미를 부여하면서, 행정의 능률성 대신 사회적 형평성을 중시하였다. 사회적 형평성은 사회적 약자에게 더 많은 혜택을 주어야 한다는 개념이다. 형평성 개념은 국민 요구에 대한 대응성을 포함한다.

- ③(O). 롤즈(Rawls)가 제시한 정의론에서 정의의 제1원칙은 평등한 자유의 원칙(principle of equal liberty)이고, 제2원칙은 차등 조정의 원칙이다. 그리고 차등 조정의 원리는 기회균등의 원리와 차등의 원리로 나누어진다. 제1원칙이 제2원칙에 우선하고, 제2원칙 중에서는 기회균등의 원칙이 차등의 원칙에 우선한다.

- ④(X). 민주적 공익관은 과정설이다. 실체설은 전체주의 체제의 공익관으로서, 공익의 의미를 소수 엘리트들이 결정한다고 본다. 이로 인해 비민주적 공익관이라는 비판을 받는다.

한편, 슈버트(Schubert)는 공익 과정설의 입장에서 공익이 민주적 정부 이론의 중심에 놓여 있다고 주장했다.

<슈버트(Schubert)의 공익론(과정설적 입장)>

- (1) 합리론(간접민주주의적 공익론) : 주권자인 국민이 정책결정자들에게 결정권을 위임하면서 정치적 책임을 확보할 때 공익이 보장된다. 정치행정이론론의 관점이다.
- (2) 이상론(자연법과 양심) : 정책결정자들이 양심에 따라 정책을 결정할 때 공익이 확보된다.
- (3) 현실론(이익집단론, 적법절차론) : 실제 정책결정 과정을 검토하여 공익을 보장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적법절차 등)를 마련해야 한다는 입장으로, 현재의 주류에 해당한다.

[정답] ④

☞ 참고 : 2020 7·9급 알파행정학, pp.186-194.

10. 미국 행정의 발달과정과 행정학의 태동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2020 지방직 7급

- ① 잭슨(Jackson)이 도입한 엽관주의는 정치지도자의 행정통솔력을 약화함으로써 국민의 요구에 대한 관료적 대응성의 후퇴 및 정책수행과정에서의 비효율성을 초래하였다.
- ② 건국 직후 미국 정치체제는 행정의 효율성을 지향하는 해밀턴주의(Hamiltonianism)가 지배했다.
- ③ 1906년에 설립된 뉴욕시정조사연구소(The New York Bureau of Municipal Research)는 좋은 정부를 구현하기 위한 능력과 절약의 실천방안을 제시하고 시정에 대한 과학적 연구를 수행했다.
- ④ 미국 행정학의 학문적 초석을 다진 애플비(Appleby)는 행정에 대한 지나친 정당정치 개입이 정책의 능률적 집행을 저해한다고 보았다.

[해설] ①(X). 잭슨(Jackson)이 도입한 엽관주의는 정치지도자의 행정통솔력을 강화시키고 중대한 정책변동에 대응이 유리하며 강력한 정책추진력을 확보할 수 있다(이러한 의미에서 '정책수행과정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라는 표현은 옳다.). 그리고 국민의 요구에 대한 관료적 대응성을 높인다. 다만, 엽관주의는 행정에 대한 비전문가를 임용함으로써 행정의 전문성을 저해하고 예산의 낭비와 행정의 비능률을 초래한다는 비판을 받는다.

②(X). 건국 직후 미국 정치체제는 자유주의와 민주주의의 이념을 상징하는 제퍼슨-잭슨 철학이 지배했다. 해밀턴주의는 정부의 적극적 역할을 통해 행정의 효과성 또는 효율성을 지향하며, 제퍼슨주의는 개인의 자유를 극대화하기 위한 행정책임 강조와 소박하고 단순한 정부와 분권적 참여과정을 중시한다. 한편, 매디슨주의는 이익집단의 요구에 대한 조정을 위해 견제와 균형을 중시한다.

③(O). 1906년에 설립된 뉴욕시정조사연구소(The New York Bureau of Municipal Research)는 좋은 정부를 구현하기 위한 능력과 절약의 실천 방안을 제시하고 시정에 대한 과학적 연구를 수행했다. 또한 테일러의 과학적 관리법을 정부에 적용하는 일을 추진했다. 이 연구소는 시정개혁에 과학적인 근거를 제공했고, 이를 통해 행정학이 학문적으로 성장하게 된 계기가 마련되었다.

④(X). ④는 정치행정이론자인 굿노우(Goodnow)의 입장이다. 애플비(Appleby)는 정치행정이론자로서, 「Policy and Administration」(1949)에서 정치와 행정은 연속적·순환적 과정에 있으며 현대행정은 정책형성이라고 주장하였다.

[정답] ③

☞ 참고 : 2020 7·9급 알파행정학, pp.30-34, 44-46.

11. 실적주의(merit system)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2020 지방직 7급

- ① 실적주의의 도입은 중앙인사기관의 권한과 기능을 분산시키는 결과를 가져왔다.
- ② 사회적 약자의 공직진출을 제약할 수 있다는 점은 실적주의의 한계이다.
- ③ 미국의 실적주의는 펜들턴법(Pendleton Act)이 통과됨으로써 연방정부에 적용되기 시작하였다.
- ④ 실적주의에서 공무원의 자의적인 제재로부터 적법절차에 의해 구제받을 권리를 보장 받는다.

[해설] ①(X). 실적주의는 인사권의 집권화를 특징으로 한다. 미국은 1883년 실적주의를 도입하면서 공정하고 독립적인 인사행정을 위해 초당적인 기구로서 독립된 중앙인사기구(연방인사위원회)를 설치·운영함으로써 인사행정을 통일적이고 집권적으로 수행하였다.

②(O). 실적주의는 기회균등을 바탕으로 실적에 따른 차등을 인정한다. 그러나 실적주의는 교육기회를 제대로 부여받지 못한 사회적 약자들에게 불리하게 작용한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등장한 제도가 대표관료제(임용할 당제와 관련됨)이다.

③(O). 미국의 실적주의는 펜들턴법(Pendleton Act)이 통과됨으로써 연방정부에 적용되기 시작하였다. 다만 1883년 실적주의 도입 당시 적용 대상 공무원은 전체 공무원 중 10%에 불과하였다. 이후 확대되어 1929년에는 80%에 달하였다.

④(O). 실적주의는 정치적 중립과 신분보장을 특징으로 한다. 따라서 실적주의 체제 하에서 공무원은 자의적인 제재로부터 적법절차에 의해 구제받을 권리를 보장 받는다.

[정답] ①

☞ 참고 : 2020 7·9급 알파행정학, pp.518-521.

12. 동기이론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2020 지방직 7급

- ① 매슬로우(Maslow)의 욕구 5단계론은 욕구가 상위 수준에서 하위 수준으로 후퇴할 수도 있다고 본다.
- ② 엘더퍼(Alderfer)의 ERG 이론은 상위 욕구가 만족되지 않으면, 하위 욕구를 더욱 충족시키고자 한다고 주장한다.
- ③ 허즈버그(Herzberg)의 욕구충족 이원론은 '감독자와 부하의 관계'를 만족 요인 중 하나로 제시한다.
- ④ 포터와 롤러(Porter&Lawler)의 업적·만족 이론은 성과보다는 구성원의 만족이 직무성취를 가져온다고 지적한다.

[해설] ①(X). ①은 Alderfer의 욕구 3단계론에 대한 설명이다. Maslow는 하위 욕구가 부분적으로 충족되었을 때 상위 욕구가 발로될 것이라는 점을 지적했다. 그러나 인간은 상위 욕구가 지속적으로 충족되지 않을 때 하위 욕구가 발로되는 욕구의 퇴행 현상이 발생하기도 하는데, Maslow는 이를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였다.

②(O). Alderfer는 Maslow와 달리 욕구 만족 시 발생하는 욕구 발로의 전진적·상향적 진행뿐만 아니라 욕구 좌절로 인한 욕구 발로의 후진적·하향적 퇴행을 제시하고 있다.

③(X). 허즈버그(Herzberg)의 욕구충족 이원론은 '감독자와 부하의 관계'와 같은 대인관계를 불만(위생)요인으로 본다.

위생요인(hygiene factors, 불만 관련 요인)	동기요인(motivators, 만족 관련 요인)
사람과 직무 상황 또는 환경의 관계	사람과 사람이 하는 일 사이의 관계
●조직의 정책과 행정 ●감독 ●보수, 지위, 안전 등 ●대인관계 ●작업조건	●보람 있는 직무(직무내용 자체) ●직무상의 성취 ●직무 성취에 대한 인정(인정감) ●책임 ●성장(승진) 또는 발전

④(X). 포터와 롤러(Porter&Lawler)의 업적·만족 이론은 성과뿐만 아니라 보상에 대한 공정성 지각을 바탕으로 형성되는 만족감을 주요 변수로 삼아 Vroom의 기대이론을 보완했다. 즉, 기존 이론들은 개인의 만족도에 의해 근무성과가 결정된다고 보았지만, 이들은 보상이 적절하면 높은 수준의 근무성과가 만족을 초래할 수 있다고 보았다.

[정답] ②

☞ 참고 : 2020 7·9급 알파행정학, pp.440-442, 447-448.

13. 다음 중 특정직 공무원에 해당하는 것만을 모두 고르면?

2020 지방직 7급

ㄱ.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	ㄴ. 검사
ㄷ. 헌법재판소의 헌법연구관	ㄹ. 도지사의 비서
ㅁ. 국가정보원의 직원	

- ① ㄱ, ㄷ, ㄹ
- ② ㄱ, ㄹ, ㅁ
- ③ ㄴ, ㄷ, ㄹ
- ④ ㄴ, ㄷ, ㅁ

[해설] ㄴ, ㄷ, ㅁ(O). 특정직공무원은 법관, 검사, 외무공무원, 경찰공무원, 소방공무원, 교육공무원, 군인, 군무원,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 국가정보원의 직원과 특수 분야의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으로서, 다른 법률에서 특정직공무원으로 지정하는 공무원을 말한다.

ㄱ(X).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은 정무직 공무원으로 임명한다.

<국가인권위원회법> 제5조(위원회의 구성)

-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상임위원 3명을 포함한 11명의 인권위원으로 구성한다.
-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대통령이 임명한다.
 - 1. 국회가 선출하는 4명(상임위원 2명을 포함한다)
 - 2. 대통령이 지명하는 4명(상임위원 1명을 포함한다)
 - 3.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3명
- ③ 위원장과 상임위원은 정무직공무원으로 임명한다.

ㄹ(X). 지방공무원법에 따르면, 별정직은 비서관·비서 등 보좌업무 등을 수행하거나 특정한 업무 수행을 위하여 법령에서 별정직으로 지정하는 공무원을 말한다. 도지사의 비서는 일반적으로 별정직 공무원으로 보한다.

[정답] ④

☞ 참고 : 2020 7·9급 알파행정학, pp.535-536.

14. 지방자치단체의 기관구성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2020 지방직 7급

- ① 우리나라는 시장의 권한이 지방의회의 권한에 비해 상대적으로 약한 기관대립형을 유지하고 있다.
- ② 영국의 의회형에서는 집행기관의 장을 주민이 직선으로 선출한다 .
- ③ 미국의 위원회형은 기관대립형의 특수한 형태로 볼 수 있다.
- ④ 기관통합형의 집행기관은 기관대립형에 비해 행정의 전문성이 높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해설] ①(X). 우리나라는 시장의 권한이 지방의회의 권한에 비해 상대적으로 강한 기관대립형을 유지하고 있다. 즉, 우리나라는 집행기관 우위의 기관대립형, 즉 강시장형을 취하고 있다.

②(X). 영국의 의회형은 기관통합형이다. 따라서 영국의 의회형에서는 의회의원만 주민이 직선으로 선출하고, 이들이 집행기능까지 담당한다.

③(X). 미국의 위원회형은 기관통합형이다.

④(O). 기관통합형이란 지방자치단체의 정책결정 기능과 정책집행 기능을 단일기관으로 하여금 담당하게 하는 형태를 말한다. 따라서 기관통합형에서는 주민에 의해 선출된 의원이 행정을 맡기 때문에 정치적 요인이 개입될 소지가 크고, 행정의 전문화를 저해할 가능성이 크다.

[정답] ④

☞ 참고 : 2020 7·9급 알파행정학, pp.855-857.

15. 공직자윤리법령의 내용으로 옳은 것은?

2020 지방직 7급

- ① 국립대학교의 학장은 재산을 등록할 의무가 없다.
- ② 공무원은 그 직무와 관련하여 외국인으로부터 수령 당시 국내 시가 10만 원 이상의 선물을 받으면 지체 없이 신고하고 인도하여야 한다.
- ③ 재산공개 대상자가 직무 관련성이 있는 경우 매각 혹은 백지신탁 해야 하는 주식의 하한가액은 5천만 원이다.
- ④ 퇴직한 재산등록의무자는 퇴직 시점까지의 재산변동을 퇴직일부터 6개월 이내에 신고하여야 한다.

[해설] ①(X). 국립대학교의 총장·부총장·대학원장·학장은 재산등록대상자이다.

구 분	공직자윤리법
등록 의무자	●정무직공무원 ●4급 이상의 일반직공무원 ●법관 및 검사,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 ●대령 이상의 장교 및 이에 상당하는 군무원 ●총장·부총장·대학원장·학장, 교육감·교육장 ●총경 이상의 경찰공무원 ●공직유관단체의 임원

②(O). 공무원(지방의회의원 포함) 또는 공직유관단체의 임직원 및 이들의 가족이 외국이나 외국인으로부터 직무와 관련하여 국내 시가 10만 원 또는 미국화폐 100달러 이상의 선물을 받은 때에는 이를 소속 기관·단체의 장에게 신고하여 국고에 귀속시킴으로써 공무집행의 공정성을 확립하려는 제도이다.

③(X). 재산공개 대상자 등은 본인 및 그 이해관계자 모두가 보유한 주식의 총 가액이 1천만 원 이상 5천만 원 이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3천만 원으로 정하고 있음)을 초과할 때에는 초과하게 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해당 주식을 매각하거나, 신탁 또는 투자신탁(주식백지신탁)에 관한 계약을 체결, 또는 이해관계자로 하여금 해당 주식을 매각하게 하거나 신탁 또는 투자신탁(주식백지신탁)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게 하고, 그 행위를 한 사실을 등록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즉, 재산공개 대상자가 직무 관련성이 있는 경우 매각 혹은 백지신탁 해야 하는 주식의 하한가액은 3천만 원이다.

④(X). 퇴직한 등록의무자는 퇴직일부터 2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그 해 1월 1일(1월 1일 이후에 등록 의무자가 된 경우에는 등록의무자가 된 날)부터 퇴직일까지의 재산 변동사항을 퇴직 당시의 등록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정답] ②

☞ 참고 : 2020 7·9급 알파행정학, pp.626-627.

16. 파킨슨의 법칙(Parkinson's Law)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2020 지방직 7급

- ① 관료는 본질적인 업무가 증가하지 않으면 파생적인 업무도 줄이려는 무사안일의 경향을 가진다.
- ② 업무의 강도나 양과는 관계없이 공무원의 수는 항상 일정한 비율로 증가한다.
- ③ 공무원은 업무의 양이 증가하면 비슷한 직급의 동료보다 부하 직원을 충원하려는 경향이 강하다.
- ④ 브레넌과 뷰캐넌(Brennan&Buchanan)의 리바이던 가설(Leviathan Hypothesis)처럼, 관료제가 '제국의 건설'을 지향한다는 입장이다.

[해설] ①(X), 영국의 해군성에 대한 실증 연구에 바탕을 둔 이론으로서, 공무원의 수는 (본질적인) 업무량의 증가와는 관계없이 필연적으로 증가한다(연평균 5.75% 증가)는 것이다. 상승하는 피라미드의 법칙(the law of rising pyramid)이라고도 한다. 부하배증의 법칙과 업무배증의 법칙으로 구성되며, 업무배증은 신설된 직위에 업무(파생적 업무)가 의도적으로 창출되는 현상을 말한다.

②③(O). ①번 설명 참조.

④(O). 브레넌과 뷰캐넌(Brennan&Buchanan)의 리바이던 가설(Leviathan Hypothesis)은 공공부문의 총체적 규모가 정부의 조세 및 지출 권한의 분권화와 반비례해(집권화와 비례해) 변화된다는 가설이다. 이는 공공지출에 대한 통제 권한이 집중될 경우, 정치인·관료·로비스트들의 선호가 재정정책에 반영됨으로써 재정지출이 늘어나고 규모가 과도하게 팽창하게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파킨슨 법칙이나 리바이던 가설은 모두 관료들의 자기 이익 추구성향과 관련되며, 관료제가 '제국의 건설'을 지향한다는 입장이다.

[정답] ①

☞ 참고 : 2020 7·9급 알파행정학, p.52.

17. 주민참여예산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2020 지방직 7급

-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주민참여예산제도를 통하여 수립한 주민의 의견서를 지방의회에 제출하는 예산안에 첨부하여야 한다.
- ② 주민참여예산기구의 구성·운영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③ 2011년 지방자치법의 개정으로 모든 지방자치단체가 의무적으로 이행해야 하는 제도가 되었다.
-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적 여건을 고려하여 지방자치단체별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운영을 평가할 수 있다.

[해설] ③(X). 주민참여예산제도는 2011년 지방재정법의 개정으로 모든 지방자치단체가 의무적으로 이행해야 하는 제도가 되었다.

도입 근거		제정·개정 시기	시행 시기
광주광역시 복구 조례		—	시행(2003)
		조례 제정(2004)	
지방재정법	임의 규정	2005. 8. 4.	2006. 1. 1.
	강제 규정	2011. 8. 4.	2012. 2. 5.

①②④(O). 아래 지방재정법 규정 참조

<지방재정법 제39조(지방예산 편성 등 예산과정의 주민 참여) >

-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예산 편성 등 예산과정(「지방자치법」 제39조에 따른 지방의회의 의결사항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 ② 지방예산 편성 등 예산과정의 주민 참여와 관련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 소속으로 주민참여예산위원회 등 주민참여예산기구(이하 "주민참여예산기구"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
 2. 제3항에 따라 지방의회에 제출하는 예산안에 첨부하여야 하는 의견서의 내용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주민참여예산제도를 통하여 수립한 주민의 의견서를 지방의회에 제출하는 예산안에 첨부하여야 한다.
-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적·지역적 여건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별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운영에 대하여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 ⑤ 주민참여예산기구의 구성·운영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정답] ③

☞ 참고 : 2020 7·9급 알파행정학, pp.643.

18. 전자정부의 효율적 구현을 목적으로 하는 전자정부법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2020 지방직 7급

- ① 행정정보의 처리업무를 방해할 목적으로 행정정보를 위조·변경·훼손하거나 말소하는 행위를 한 사람은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 ② 전자정부의 발전과 촉진을 위해 전자정부법은 전자정부의 날을 규정하고 있다.
- ③ 행정기관의 장은 3년마다 해당 기관의 전자정부의 구현·운영 및 발전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전자적 대민서비스와 관련된 보안대책을 국가정보원장과 사전 협의를 거쳐 마련하여야 한다.

[해설] ③(X). 중앙사무관장기관(중앙행정기관 및 그 소속 기관과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는 행정안전부를 말한다.)의 장은 전자정부의 구현·운영 및 발전을 위하여 5년마다 행정기관 등의 기관별 계획을 종합하여 전자정부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여기서 "중앙사무관장기관"이란 국회 소속 기관에 대하여는 국회사무처, 법원 소속 기관에 대하여는 법원행정처, 헌법재판소 소속 기관에 대하여는 헌법재판소사무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속 기관에 대하여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처, 중앙행정기관 및 그 소속 기관과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는 행정안전부를 말한다.

- ①(O). 행정정보의 처리업무를 방해할 목적으로 행정정보를 위조·변경·훼손하거나 말소하는 행위를 한 사람은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이 내용은 전자정부법 벌칙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으로서 옳다.
- ②(O). 전자정부법에서는 전자정부의 우수성과 편리함을 국민에게 알리고 국제적 위상을 제고하는 등 지속적으로 전자정부의 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매년 6월 24일을 전자정부의 날로 지정하고 있다.
- ④(O). 행정안전부장관은 전자적 대민서비스와 관련된 보안대책을 국가정보원장과 사전 협의를 거쳐 마련하여야 한다. 그리고 중앙행정기관과 그 소속 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보안대책에 따라 해당 기관의 보안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정답] ③

☞ 참고 : 2020 7·9급 알파행정학, pp.977-980.

19. ㉠, ㉡에 해당하는 권력모형을 옳게 짝 지은 것은?

2020 지방직 7급

○ (㉠)은 전국적 차원이 아니라 지역사회의 지배구조에 초점을 맞추면서, 소수 엘리트가 강한 응집성을 가지고 정책을 결정하고 정치에 무관심한 일반대중들은 비판 없이 이를 수용한다고 설명한다.

○ (㉡)은 정치권력에 두 얼굴(two faces of power)이 있음을 주장하는 입장에서부터 권력의 어두운 측면이 갖는 영향력에 대해 관심을 가지지 않았다는 점을 비판받았다.

- | | ㉠ | ㉡ |
|---|-----------|-------------------|
| ① | 밀즈의 지위접근법 | 달의 다원주의론 |
| ② | 밀즈의 지위접근법 | 바흐라흐와 바라츠의 무의사결정론 |
| ③ | 헌터의 명성접근법 | 달의 다원주의론 |
| ④ | 헌터의 명성접근법 | 바흐라흐와 바라츠의 무의사결정론 |

[해설] ③(O). ㉠에 들어갈 내용은 헌터(Hunter)의 명성접근법, ㉡에 들어갈 내용은 달(Dahl)의 다원주의론이다.

- ① 헌터의 명성접근법에 대한 설명이다. Floyd Hunter의 명성적 접근법은 지역사회의 권력구조에 대한 연구로서, 조지아 주(州)의 Atlanta시를 대상으로 명성이 나 있는 40명을 뽑아내어 이들의 성분(기업가 23명, 노동지도자 2명, 변호사 5명, 고위공직자 4명 등)을 조사하였다. Hunter에 의하면, 응집력과 동료의식이 강하고 협력적인 기업 엘리트(선정 인원의 절반 이상이 기업가)들이 지역사회를 지배한다는 것이다. 일반대중들은 이들이 결정한 정책을 그대로 받아들인다.

이에 반해 Wright Mills의 지위접근법은 전국적 차원의 연구로서, 정부, 군대, 기업의 엘리트의 연합체인 군산복합체(military-industry complex)가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음을 강조하고 있다. Mills에 의하면, 중요한 결정은 권력 엘리트에 의해 결정되고, 사소한 문제만이 의회에서 국민의 관심을 받으면서 논의될 뿐이다.

- ㉡ 문장 표현 때문에 순간적으로 착각할 수 있는 지문이다. P. Bachrach & Baratz(1962)가 「권력의 두 얼굴」이라는 책에서 Dahl의 다원론을 비판하면서 제시한 모형이다. 이들은 Dahl의 모형이 '권력의 밝은 얼굴'은 보았으나, '어두운 얼굴'은 보지 못하였다고 비판했다.

[정답] ③

☞ 참고 : 2020 7·9급 알파행정학, pp.234-238.

20. 예산결정이론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2020 지방직 7급

- ① 합리모형은 예산상의 편익을 극대화하기 위한 결정방식이지만 규범적 성격은 약하다.
- ② 예산 결정에서 기존 사업에 대한 당위적 예산 배분을 제어할 수 있다는 점은 점증모형의 유용성이다.
- ③ 단절균형모형을 따르는 예산결정자는 사후후생을 고려하지 않고 최악을 피하는 전략을 사용한다.
- ④ 다중합리성모형은 정부 예산의 성공을 위해서는 예산 과정 각 단계에서 예산활동 및 행태를 구분해야 함을 강조한다.

[해설] ①(X). 합리모형은 예산상의 편익을 극대화하기 위한 결정방식이다. 합리모형은 이상적·규범적·연역적 성격이 강하고, 점증모형은 현실적·실증적·귀납적 성격이 강하다.

②(X). 점증모형은 예산 결정에서 기존 사업에 대한 예산 배분을 당연한 것으로 인정한다. 기존 사업에 대한 예산배분을 당연한 것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은 영기준 예산(ZBB)과 같은 합리모형의 특징이다. 따라서 예산 결정에서 기존 사업에 대한 당위적 예산 배분을 제어할 수 있다는 점은 합리모형의 유용성이다.

③(X). ③은 점증주의에 대한 설명이다. 점증주의 학자인 윌다브스키(Wildavsky)는 예산결정자들이 극대화 기준을 사용하지 않고 만족화 기준을 사용하며, 용하게 헤쳐 나가고(get by), 사고를 피하며(avoid trouble), 최악을 피하는(avoid the worst) 전략을 구사한다고 본다.

한편, 단절균형모형(Baumgartner & Jones)은 예산 재원의 배분 형태가 항상 일정하게 유지되는 것이 아니라, 특정 사건이 상황에 따라 균형 상태에서 급격한 변화가 발생하는 단절 현상이 발생한 후 다시 균형을 지속한다는 이론이다. 이 모형은 예산이 전년 대비 일정 정도의 변화에 그친다는 점증주의이론의 한계를 비판하면서 제시되었다.

④(O). 다중합리성모형(multiple rationalities model)은 Thumaier & Willoughby(2001)에 의해 제시된 모형으로서, 정부 예산에 대한 과정적 접근에 근거한다. 이 모형은 Kingdon의 정책결정모형과 Rubin의 실시간 예산결정모형을 통합한 모형이다. 다중합리성모형은 정부 예산의 성공을 위해서는 예산 과정 각 단계에서 예산활동 및 행태를 구분해야 함을 강조한다.

<Rubin의 실시간 예산운영모형>

호름	정 치	관 심
세입 호름	설득의 정치	세입원의 기술적 추계, 누가 부담할 것인가?
세출 호름	선택의 정치	지출의 우선순위, 누구에게 배분할 것인가?
예산균형 호름	계약조건의 정치	정부의 범위와 역할에 대한 결정
예산집행 호름	책임성의 정치	계획에 따른 집행과 수정 및 일탈의 허용 범위
예산 과정 호름	누가 예산을 결정하는가의 정치	예산과정에서 누가 주도적 역할을 하는가?

[정답] ④

☞ 참고 : 2020 7·9급 알파행정학, pp.677-684.